

# 공평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곽치영 / 민주당의원, 한국장애인 정보격차 협의회 회장



한 국가가 문명국이나 아니냐를 가름하는 척도는 그 나라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진입단계에 이르렀다는 허장성세 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열악하다는 현실이 숨어있다.

이제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훌륭한 산업일꾼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실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인터넷이용인구 인구 1천 9백만명(2000년 12월 말 기준/한국정보문화센터 발표), 가입자가 4백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인구, 인터넷 이용률 40.3%.

이렇듯 각종 수치에서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인프라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수준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인프라의 수준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격차를 정보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격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지역 13세 이상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애인·여성의 정보화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어김없는 정보화 일등국의 모습을 한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결과,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인은 4%, 장애인 18%, 여성 18%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평균 수강률 38.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실제 이용률에서도, 노인은 단지 3%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9%, 여성은 21%였다.

장애인은 그동안 사회의 주류에서 비껴있었으며, 소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제·문화적 혜택의 수준은 아주 열악한 것이었다. 새해들어 각종 언론에서는 관심밖이었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사회의 주요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Digital Divide는 21세기의 세계적인 화두인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13개 벤처기업체와 12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창립대회가 있었다.

이 협의회는 현장에서 정보격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험하는 장애인 단체, 정보격차 문제를 연구하는 정책전문가 집단·학계, 정보화를 주도하는 인터넷·정보통신 관련 기업체 등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의 수행을 위한 사업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펼칠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이 협의회 회장직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보화사회가 도래한 이후에는 정보접근에 따른 격차의 심화는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화는 장애인에게 복음일 수 있다.

사실 과거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체력을 바탕으로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보화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고, 생산의 주역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성실성과 드물지 않게 발견하는 천재성과 집중력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탁월한 산업일꾼이 될 수 있는 장점이다. 정보화 사회의 이종적 요소를 기회로 삼아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취약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장애의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맹인, 농아,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적용의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보니 시장이 취약해,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꺼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기술의 개발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인 실정이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의 10%인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와 책임을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답은 간명하다. 정부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정부는 시장성이 취약해 꺼려지고 있는 적절한 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정보화 교육센터조차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시책은 여전히 산업사회의 나눠 주기식 복지정책에만 매달려 있고, 정보통신부에는 장애인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갈길이 바쁘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정보화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장애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장애인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단정짓고, 그들만의 단절된 소외집단의 무능력자로 취급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대한 문인이었던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영국수상 처칠,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영화배우 비비언 리, 과학자 아이작 뉴턴 등이 모두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인이었다. 그리고 레인맨이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실성, 집중력, 혹은 천재성을 버려두고 정보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예비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장애인구 가운데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이제는 장애에 대한 관념을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개인주의적인 장애관을 탈피하여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나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등의 관점을 견지해야겠지만,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만 이라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사회 공동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정보화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의 수단으로서 정보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문명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우수한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길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는 시기가 늦을수록 이것을 치유하는 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격차가 더 심화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 살기좋은 나라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창의적 사고와 의욕을 갖고 있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의 물결을 기회로 잡아 지식정보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를 핵심적 위치에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초고속망의 보급지원,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콘텐츠의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